

기업 상속이 罪 인가 韓 부담, OECD 최고

한경연,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점

상속·소득세 할증평가 102%
쓰리세븐, 상속세에 '적자 전환'
유니더스, 사모펀드에 경영권 넘겨
"주요국가 대비 최대 253% 높아
정별적 상속세 전면 개편돼야"

기업승계 시 정별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와 자본이득 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돼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에서도 우리나라 일본(100%)에 이은 2위(92%)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에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OECD 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OECD 14위)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 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 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고, 일본(55.0%)·미국(39.9%)·독일(30.0%)·영국(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46~253%만큼 높은 만큼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정별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정별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기자 ysw@metroseoul.co.kr

韓, 문현정보 분야 글로벌 표준화 주도

오삼균·심명현 교수 의장·간사 선출

문현정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수표준원은 5일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 이사회(TMB)에서 정회원 국가들의 투표를 통해 성균관대 오삼균 교수와 국립원심명현 전문위원이 각각 문현정보 기술 상호운용성 표준화위원회(TC46/SC4) 의장과 간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현정보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게 하고, 디지털

문현정보의 상호호환성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표준을 다루는 문현정보 분야의 중요 위원회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와 비(非)표준화된 문현정보 일체를 국제표준 기반의 디지털 문현정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객체식별자(DOI)를 체계화하고, 각종 데이터의 상호호환 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표준을 통해 국내·외 학술정보 체계 통합을 유도하고 유통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고령자 돌봄 로봇위한 영상데이터 공개

ETRI, 실생활 가정서 3D 영상촬영 6589개 3차원 영상데이터셋 공개

국내 연구진이 고령자의 일상을 돋는 휴먼케어로봇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와 소프트웨어(SW)를 공개했다. 이로써 고령화 시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상용화 연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로봇 환경에서 고령자의 일상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위한 3차원 영상 데이터셋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자케어 로봇 연구를 위해서는 로봇의 관점에서 고령자를 촬영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지만 로봇 연구에 적합하면서도 사람의 일상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에 특화된 데이터는 전무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ETRI는 2018년부터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와 협력해 고령자가 실제 생활하는 가정 30곳을 3D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데이터를 확보했다. 공개하는 데이터셋은 총 6589개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초로 고령자 실주거 환경에서 로봇 시점으로 촬영한 3D 행동인식 데이터라 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고령자케어로봇을 위한 행동 인식 연구를 진행하며



ETRI 연구진이 고령자에 특화된 휴먼케어 로봇 데이터를 확보해 점검하고 있다. /ETRI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주거 환경을 모사한 아파트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데이터를 마련기도 했다. 당시 ETRI는 55가지 일상행동이 포함된 3차원 영상 11만2620개를 확보, 세계 최대 규모의 3D 영상 데이터셋을 공개했다.

연구진의 노력으로 얻어진 고품질 데이터는 협약을 맺고 국내외 다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된다. 실제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는 연구목적용으로 국내 대기업, 대학 등 30여 개 기관, 해외 연구소, 대학 등 10여 개 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용이 이뤄졌다.

또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공지능연구단은 가상으

로 행동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해 공개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직접 촬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 시점, 조명 등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얻을 수 있다. 덕분에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와 도메인 적응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ETRI는 이외에도 로봇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위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와 핵심기술들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진은 ▲고령자의 일상 행동이 발생한 시점을 검출하는 행동 검출 기술 ▲얼굴 특징과 옷차림 등 외형 정보를 인식하는 외형특징 인식 기술 ▲빌화에 적합한 제스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등 총 8가지 기술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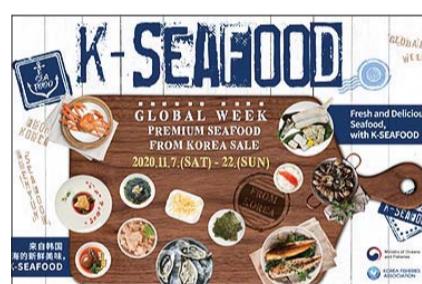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해수부, 美·中 등 11개국서 韩 수산물 알린다

내일부터 KGW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산물 수출 시장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7일~22일까지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에서 '2020 K-SEAFOOD Global Weeks'(2020 KGW)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이번 행사는 11개 주요 수출국가의 온·오프라인 매장 463개 소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행사 기간 동안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와 연계해 우리 수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할인·시식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김스낵, 어육소시지 등 간식류와 조미김, 어묵, 전복 등 간접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수산식품을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현지에서 유명한 중국의 타오바오·핀둬둬,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일본 라쿠텐, 태국 라자다 쇼핑 등에서 흥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미국의 H마트, 베트남 Big C, 중국 CGV 등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등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시장도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정용 간편식 등으로 소비되는 조미김(3억4700만달러, 13.1%↑), 참치캔 등 어류가공품(4900만달러, 18.3%↑) 등 일부 품목은 10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용수 기자 hys@

농가·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12만1천개 대상 지급규모 2.3조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고려해 이달부터 앞당겨 조기 집행된다. 총 지급액은 제도 개편 전인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지급 규모는 2조 2753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개 농가·농업인(면적 112만 8000ha)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제도 개편 전 지난해 지급된 쌀·밭·조건 불리직불금(1조2356억 원)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만명)이다. 논·밭으로 구분해 보면, 논농가(36만1000ha)에 8016억 원, 밭농가(16만7000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작 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10.6%) 대비 11.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